

# 경남도 에너지 절약·차량 5부제 캠페인

### 작은 실천이 에너지 위기 극복의 출발, 경남 에너지 절약 실천 홍보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국가적 위기 극복에 앞장 서기 위해 26일 도청 사거리와 청사 현관 입구에서 '에너지 절약 및 차량 5부제 동참 캠페인'을 실시했다.

앞서 정부는 18일 오후 3시부터 24일 오후 3시까지 도로에 대해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으며,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계

획을 발표했다.

이에 경남도는 정부 정책에 맞춰 공공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민간 분야에는 자율적인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확산하고 도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박완수 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직원과 한국에너지공단 경남지역본부, 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에너지 절약 실천

을 홍보했다.

경남도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에너지 절약을 도민 생활 속 실천으로 확산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캠페인 현장에서는 차량 5부제 참여 방법과 대중교통 이용 필요성을 안내하고, 냉·난방기 적정온도 유지, 불필요한 조명 끄기, 대기전력 차단, 고효율 가전제품 사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교체, 사위 시간 줄이기 등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방법을 집중 홍보했다.

아울러 도는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기 위해 분청 내 비상 에너지 절약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부서별 '에너지 지킴이' 지정과 승용차 5부제 준수 점검 등을 통해 직원의 실천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공공부문 뿐 아니라 도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생활 속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성룡 기자

# “지역상품 구매율 70% 정조준” 상시 모니터링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6일 「2026년 지역상품 구매확대 종합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올해 1월 지역상품 구매 확대를 부산시 핵심 경제 정책으로 선포한 이후 ▲2개월간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조달청 공공계약 데이터 30만 건 전수 분석을 통해 도출한 지역상품 구매 사각지대 진단 결과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밀 종합대책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상품 구매확대 정책 추진 2개월 만에 지역상품 구매율이 63%로 급증하며, 약 2천6백여 원의 신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순환 효과를 본격화되는 실적을 거뒀다.

### 부산 지역상품 구매확대 종합대책 보고회, 조달 데이터 30만건 전수분석



이번 종합대책은 조달청 계약 데이터 30만 건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기반으로 수립된 것이 특징이다.

시는 약 2천600억 원 규모의 지역생산 부가가치가 추가 창출되는 등 민생 경제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당초 목표였던 구매율 60%를 70%로 상향 조정하며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런 종합대책은 조달청 계약 데이터 30만 건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기반으로 수립된 것이 특징이다.

분석결과 ▲국가기관 발주 대형공사 시 지역업체 참여 가점(2점) 신설 건의 ▲장기계속계약의 전략적 분할 발주 검토 의무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

초로 조달청 공공데이터 연동을 통해 2천405개 기관의 계약 내역을 24시간 추적하는 디지털 파수꾼을 가동한다. 이번 종합대책의 핵심은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공공계약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조달청 공공데이터와 연동해 부산 소재 2천405개 공공기관의 계약 내역을 24시간 추적한다.

시는 민간보조금·위탁금 5천525억 원에 대한 지역업체 우선 이용도 의무화하고 지역상품 구매를 '사회적 책임'으로 승격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건설 ▲공공구매 ▲민간건축 등 분야별로 흩어져 있던 각 기관의 실무 전략이 하나의 종합대책으로 통합해 지역상품 구매 확대에 대한 실행력과 추진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용우 기자

# 경주 i-SMR 초도호기 유치를 추진한다

### 경북 경주 소형모듈원전(SMR) 유치 총력, 국회서 산·학·연 머리 맞대



경상북도는 26일 김석기·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경상북도, 경주시가 주관한 '철강산업 재도약과 탄소중립을 위한 소형모듈원전(SMR)'을 주제로 소형모듈원전(SMR)-철강생태 국회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경주와 포항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정동욱 중앙대 교수(前 i-SMR 예타 기획위원장), 이상일 서울대 교수,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 박홍준 동국대 교수,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기후환경안전실장 등 철강과 원자

력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 및 경주 SMR 유치를 기원하는 경주시민 등 총 50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설홍수 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와 소형모듈원전(SMR) 육성전략',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실장의 '철강산업의 탄소중립과 소형모듈원전(SMR) 필요성'에 대한 발표에 이어 정동욱 교수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가 진행됐다.

패널토론의 좌장을 맡은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철강산업의 친환경 수소환원철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철강기업 생존의 문제이며, 이를 뒷받침할 대규모 무탄소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청정수소의 확보를 위해서는 소형모듈원전(SMR) 활용이 유일한 대안임을 강조했다. 철강전문 요급제 신설 등 정부와 지역정치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였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소형모듈원전(SMR) 연구기반을 담당할 무대왕과학연구소 개원, ▲경주 SMR 국가산단 조성, ▲SMR 제작지원센터 설립 등 관련 기반을 구축해 왔다.

아울러, 경주 소형모듈원전(SMR) 유치지원 T/F팀을 발족하고, 유치지원 자문회의, 시민 설명회 등을 추진했으며, 경주시의회에서 SMR 유치 동의안이 만장일치 통과됨에 따라, 3월 25일 경주 신규원전(SMR) 자율유치 신청서를 한수원에 제출하는 등 유치 추진에 힘을 쏟고 있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철강산업의 탈탄소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은석 기자

# 대구시 2026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 공개해

### 구·군의회 의원 등 총 133명의 대한 지난해 1년간 재산 변동사항 공개

대구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인 구·군의회 의원 125명과 공직유관단체장 8명 등 총 133명에 대한 2026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3월 26일(목) 대구광역시 공보 및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했다.

재산등록 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이듬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기

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는 구·군의회 의원 및 공직유관단체장이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는 정무직(지방자치단체장 등) 및 1급 공무원, 광역의회 의원 등이다.

세부내역은 대구시 공보 홈페이지 또는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대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의 평균 신

고재산액은 12억 8,600만 원으로, 최고 신고금액은 123억 8,700만 원, 최저 신고금액은 -1억 200만 원이다.

재산공개 대상자 가운데 62.4%인 83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37.6%인 50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재산변동 주요 사유를 살펴보면 재산 증가요인으로는 급여 저축, 상속, 채무 상환, 주식 가액 상승 등이 있었으며, 감소요인으로는 토지 공시지가·주매 공시가격 하락 등에 따른 부동산 가액 감

소, 채무 증가, 직계 존·비속의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에 따른 기존 신고재산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말까지 대상자들의 재산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등록 재산은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한 경우, 그리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은석 기자

# 2026 오케이(OK)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시작

### 울산시 오는 3월 28일, 중구 유곡동 벚꽃바람길에서 올해 첫 행사 마련



울산시는 '2026년 오케이(OK)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을 오는 3월 28일 중구 유곡동을 시작으로 본격 개시한다.

'오케이(OK)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제기하고 만족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원이나 아파트단지 등 주거 밀집지역을 직접 찾아가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는 울산시의 대표적인 '올부심 생활+' 사업(프로젝트)이다.

올해 첫 행사는 3월 2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중구 유곡동 벚꽃바람길에서 열린다.

현장에서는 주민 수요가 가장 높은 ▲칼집(1인 2차량) ▲화분 초화 심기(분갈이, 1인 1개) ▲자전거 수리 ▲나무도마 수선 및 체형 ▲선봉기 단순 수리(15대 한정) ▲장난감 수리 ▲반려동물 위생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에 따라 지자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기간(4월 4일~6월 3일)을 준수하여 전체적인 행사 운영시기가 조정됐다.

이에 중구에서는 3월 28일 유곡동과 4월 3일 복산동 도화공원

에서 우선 운영한 뒤, 선거가 끝나는 6월 3일 이후부터 5개 구군 55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울산시와 구군은 서비스 품질과 물량을 보강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자원봉사자 참여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현장 집합을 줄이기 위해 안전 인력을 배치하고 대기 동선을 개선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선거 일정으로 본격적인 순회는 6월 이후 시작되지만, 봄을 맞아 중구 유곡동에서 열리는 첫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호근 기자

# 언제든 말기는 아이돌봄 환경을 만든다

경상남도는 아이돌봄 서비스 대기를 해소하고 적기 서비스 제공을 위해 627억 원을 투입해 돌봄비 처우 개선과 제공기관 확대 등 돌봄 공백 최소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도는 최근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심화된 돌봄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25%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고, 서비스 공급과 이용 여건을 동시에 개선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 아이돌봄 지원 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하고, 한부모·조손 가구 등 취약가구의 연간 돌봄 지원 시간도 기존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려 돌봄 안전망을 더욱 강화한다. 돌봄 인력 확보를 위한 처우 개선도 병행한

다.

아이돌봄비 활동수당을 시간당 11,120원(530원↑)으로 인상하고, ▲영아돌봄수당 인상(시간당 2,000원, 500원↑), ▲유아돌봄수당(시간당 1,000원) 및 야간긴급돌봄수당(1일 5,000원)을 신설해 안정적인 인력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속적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건강증진비 연간 4만 원 상향(1만 원↑) ▲동 지역 교통비 4,000원(1,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아이돌봄비 처우 개선을 지속 확대해 인력 이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부부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도는 2023년 7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산층 가구(기중중위소득 76~120% 수준, 나형)의 지원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해 실질적인 이용 부담을 낮춘다.

아울러, 창원·김해 등 돌봄 수요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 복수 지정'을 추진한다.

창원과 김해에는 12월 개소를 목표로 복수 기관을 추가 지정해 기존 시군별 1개소 운영 체제에서 벗어나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이용 대기 해소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강숙이 여성가족과장은 "도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성룡 기자

# 달서구 두류공원에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확대설치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이용객이 많은 두류공원에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1대를 추가 설치했다.

현재 달서구에는 공원,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도서관 등 총 37개소에 39대의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설치에는 두류공원 내 기존 충전기 중 노후 및 고장으로 사용이 어려웠던 장비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이에 따라 2대의 충전기가 모두 정상 운영

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설치된 급속충전기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최대 2대까지 동시에 충전할 수 있으며,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특히 충전량 표시창을 통해 완충까지의 예상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 이용 편의성을 높였고, 모바일 기기 충전 기능도 함께 제공해 일반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바퀴 공기주입 기능까지 갖춰 다양한 상황에서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외출과 사회활동에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공 인프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전동보장구는 장애인의 일상과 사회참여에 있어 중요한 이동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고, 누구나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도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달서구는 아동보호주간

을 맞아 아동권리와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월성네거리 일원에서 「민·관 합동 아동보호 캠페인」을 실시했다.

행사는 달서경찰서를 비롯하여 아동위원, 자율방범대 등 130여 명이 참여해 시민들에게 아동보호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참여자들은 "아이의 안전은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아동 보호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며 지역사회 참여를 이끌어냈다.

한은석 기자